

광주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본격화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내년 착공 내달 '더현대' 설계·건축 인허가 공공기여금 착공 후 5년간 분납 복합쇼핑몰 개점 전 인프라 구축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의견 대립이 예상됐던 공공기여금 3000억원은 사업자가 요구한대로 착공 후 5년간 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랜드마크 특급호텔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는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기로 했다.

통상 10%임을 감안하면 2배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는데,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

하기로 했다.

또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랜드마크 특급호텔과 관련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이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

안을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를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복합쇼핑몰의 약속된 개점과 공공기여 납부, 특급호텔 등 랜드마크타워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 만큼 이 사업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올 상반기 수출액 241억달러 돌파

화학공업 제품 수출 783% 증가 농수산물식품 25.5% ↑ '역대 최대'

전남도는 올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8%의 성장률을 달성한 241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남 주력산업과 농수산물식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이들 품목은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화학공업 제품과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타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무려 782.9% 증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농수산물식품 분야 수출은 역대 최대인 25.5%의 증가율을 달성하며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수출 품목으로는 김과 쌀 등의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김 수출은 전년대비 58.3% 증가한 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오지현 기자

양부남 "소상공인 전기·수도료 감면 현실과 괴리"

양부남(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기·수도 요금 감면 실적은 턱없이 저조하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총 409억9000만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2520억원)의 약 16% 규모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사업도 지난해 7억2827만원을 지원



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최대 목표액 55억원의 13% 남짓한 수준이다.

낮은 지원 실적이 비현실적인 조건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1, 2차 전기료 지원 대상의 경우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월 매출로 따지면 250만원 수준이다.

양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지원 조건을 6000만원으로 완화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인철, '친환경차 세계 혜택 연장 법안' 대표발의

조인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계 혜택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올해 세계 지원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세계 혜택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서울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전당대회 당권주자들, 첫 토론회서 격돌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 중부세·사당화·민생 등 공방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두관·이재명 당 대표 후보(기호순)가 18일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와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놓고 첫 방송토론회부터 격돌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과 사당화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두관 후보는 "기본소득이 복지 영역에서 확보돼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중부세, 특히 금투세는 1400만 명 중에 1%,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만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중부세든 금투세

든 이걸 논쟁의 대상이기에 이게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중부세 전체에 관한 이야기 보단 내가 돈 좀 열심히 벌어서 실제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며 "금투세도 정부의 문제가 제일 컸기에 정부의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지수 후보는 "미래 세대가 금투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젊은 친구들의 돈과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의 일극 체제와 다양성 실종을 두고는 김 후보 두명이 이 후보를 향해 집중적인 공세를 폈다.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당의 DNA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당원이

꽤 많다"며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 때문에 제왕적 총재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 체제에 대해 그렇게(일극체제) 느끼는 당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일극체제라는 표현에 동의한다"면서도, "보이기에 일극체제인데 저희(당권 후보들)가 들어와서 다극체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일극체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당원 지지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극체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걸 제재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당원의 지지를 받는 조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당원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맞받아쳤다.

서울=김선욱 기자



@jnilbo
진일보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ibo@jnilbo.com